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전략

노부쿠니 마코토(信岡眞幸) /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조사연구부장

동북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이 지역의 냉전 이후 세계에 하나의 이상형(냉전후 세계 모델)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를 전제로 2차대전 청산을 완료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냉전하의 동서 경계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극동 러시아, 중국 동북 3성, 한반도에는 아직도 병력이 대치하고 있어 지금도 냉전구조가 현존하는 곳이다. 일본은 아직도 2차대전 청산 문제가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3국의 변방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방치되어 온 지역이다. 이 지역이야말로 냉전 이후 세계모델을 시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냉전후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정당성(Historical Legitimacy), 즉 모든 세계인이 수용하고 후세에 올바른 선택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평화의 배당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② 안전보장 전략을 군사력에 의한 분규 억제나 해결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의한 분규 예방으로 대체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 일본은 2차대전 청산을 완료하고 나아가 이 이념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평화의 배당문제에 대해 서술해 보자. 세계 국방비 지출은 1992년 현재 1985년 가격으로 5,600억 달러, 명목가격(미국 GDP디플레이터에 의해 補正)으로 7,170억 달러로 이는 OECD 가맹 20개국의 ODA 총액 557억 달러의 1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런 거액의 국방비 지출은 베를린 장벽 붕괴, CIS 해체 이후에도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냉전후의 세계가 역사적으로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국방비 지출 총액을 실질적으로 반감시킨다면 가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절약된 국방비 일부가 ODA나 지구 환경 보전대책 강화 등 세계복지 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 세계평화에의 공헌과 UN 중심의

외교를 표방하는 일본으로서는 평화의 배당 문제에 있어서 UN 총회가 가맹국의 국방비를 10년내에 50% 삭감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화 배당에는 단순히 국방비 부담을 삭감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냉전 구조하에서는 불가능했던 국경의 제약을 극복한 '경제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연구협력과 관련지어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두번째로 경제개발을 통한 평화구축을 위해서 일본은 다국간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체계를 창출·강화하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각종 격차를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그 수단으로서 협력 상대국의 수출지향형 경제개발정책의 지원,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자금 협력, 기술 이전, 그리고 소득 격차 억제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국제협력력이 유효할 것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3절에서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가 새로운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양진영 상대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동맹국내 또는 각국에 있어서 존재했던 내부 억제력이 냉전구조 소멸과 함께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이 경제 이익에 너무 급급하게 되면, 결국 이 이익을 위해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다시 치닫게 될 것이다.

평화배당을 확보하고 향후 부력의 위협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은 ODA에 지구환경

보호역할을 맡기고, 군사 지출을 증가시키는 국가에의 원조를 삭감한다는 기본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

남북경협에 대한 일본의 협력

남북경협 중에 가장 중요한 안건은 통일문제일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통일에 합의하고 한국이 당사자로서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본의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자. 우선 남북통일의 소프트랜딩 시나리오에서 분제의 싹마리를 풀어 나가 보자.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는 발상은 행동 목표와 수단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분제의 소재를 사전에 쉽게 직시할 수 있다.

먼저 남북통일 후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보자. 만일 통일이 원활히 완료된다면 이는 북한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 북한이 국제사회의 회원으로 등장할 것, 그리고 독일 재통일에서 얻은 교훈에 비추어 ㉡ 북한 노동력에 대한 충분한 고용 흡수능력이 준비될 것, ㉢ 북한의 소득 수준이 한국 수준에 어느 정도라도 접근해야 할 것, 그리고 당연하지만 ㉣ 한국 경제가, 1인당 실질소득 수준이 현재 한국의 1/8인 북한 경제력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4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경제가 외부에 개방되어야 하며, 국제 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외향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가 개방체제라는 것은 반드시 정치체제도 개방체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체제에 한해서는 중앙 계획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우위성을 이미 역사가 입증했다. 현재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일당제를 고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중이다. 이에 중국 연안 지역의 개방경제는 이미 예상을 크게 넘어선 확고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사회체제가 다른 지역간

의 통일은 홍콩과 중국이 그 선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북한도 체제문제와 관계없이 외국과의 무역,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①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제협력을 하려 해도 국교가

없는 것이 커나란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공적 자금 원조가 불가능하며, 간접적으로는 일본기업은 정치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무조건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북한과 일본이 국교 회복을 위해 정면에서 2차대전 청산 문제를 다루는 것, 또는 ② 과거 중국과 일본간

에 시도되었던 정경분리주의에 입각하여 교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의 국교회복 교섭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본은 대북한 전쟁 배상에 관한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은 완전한 핵사찰을 받아들여 핵확산금지조약을 엄수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될 것이다.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제반 여건은 현재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KEDO에의 일본 협력이 국교정상화 대화의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②의 정경분리 방식은 경제교류에는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되지만, 대규모의 직접투자가 수반되는 경제교류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일본기업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는 특히 신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경제가
외부에 개방되어야 하며, 국제 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외향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가
개방체제라는 것은 반드시 정치체제도
개방체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체제에 한해서는 중앙 계획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우위성을 이미
역사가 입증했다.

” 일본기업내 인사기준이 원칙적으로 ‘감점주의’여서 적극적인 메리트 시스템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High Risk, High Return’의 사업은 경원되기 십상인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 결국 북한과 일본의 국교 회복이 조건 ①의 필요조건이다.

다음으로 남북통일에 있어서 생산성이 낮은 북한쪽에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재고용할 수 있는 대안이 준비되어

야 한다. 지금부터 통일 시점까지 북한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군비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 잉여 노동력을 현재 노동력의 20% 수준으로 보면 약 250만 명에 해당하는 새 직장이 필요하다. 이를 서서히 유효고용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액은 현재의 1인당 소득 수준 1,000 달러에 대해서 부양계수를 1.6, 자본산출계수를 2 내지 2.5로 보면, 80~100억 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KEDO에의 협력 자금 40억 달러의 2~2.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년후의 통일을 상정하면 년 4~5억 달러이다. 이 금액의 반 이상을 한국측이 부담한다면 일본이 지원해야 할 규모는 연 2억 달러 이하가 될 것이다.

이는 현재 일본 방위 예산의 0.5% 이하이다. 독일 통일은 이러한 준비 기간 없이 일시에 대량의 노동력을 흡수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계획적인 준비가 가능한 한반도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고용·흡수 창출의 일환으로 나진·선봉을 포함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TRADP)이 유효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일본의 원조를 얻어내는 것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을 경유하는 것으로 하면 기술적으로도

“
고용·흡수 창출의 일환으로 나진·선봉을 포함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TRADP)이 유효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일본의 원조를 얻어내는 것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을 경유하는 것으로 하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미국도 남북 통일비용을 일본이 분담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일본도 언젠가는 정식으로 정책과제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의혹에 경제제재로 대응하는 것이 제어 불가능한 파멸의 위험성이 잠재된 대응책이라면, 경제협력을 통한 안전보장 대책은 일본에 있어서도 비용도 적게 들고(협력의 성과 일부는 무역이나 투자를 통해 결국 일본으로 환원된다) 효과 또한 크다.
”

가능하다. 더욱이 미국도 남북 통일비용을 일본이 분담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일본도 언젠가는 정식으로 정책과제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의혹에 경제제재로 대응하는 것이 제어 불가능한 파멸의 위험성이 잠재된 대응책이라면, 경제협력을 통한 안전보장 대책은 일본에 있어서도 비용도 적게 들고(협력의 성과 일부는 무역이나 투자를 통해 결국 일본으로

환원된다) 효과 또한 크다.

조건 ㉔는 통일 시점까지 북한이 한국 이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높은 자본형성률을 유지하면서 근대산업을 통한 교육과 노동자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통일 이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 자본 스톡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며, 따라서 감가상각률은 높아질 것이다. 가령 소요 감가상각률을 4%, 자본계수를 3으로 낮게 잡아도(에너지, 교통통신 등 자본계수가 10~20에 달하는 인프라 부문에의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실제 평균 자본계수는 고도성장기에는 5를 넘는다), 예들 들어 평균 8%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DP의 36%를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는 북한 자력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국방비 지출 삭감분으로 투자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대외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북한의 경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원조하는 측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로써 냉전 청산이 가능하다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의 경제협력은 비용 효과면에서 훌륭한 프로젝트인 셈이다. 대국적 견지에서 관련 국가가 이를 위한 비용 부담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된다.

③에 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다. 한국 경제는 이미 고도성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이 케도에 올라서면 기술적으로 국제산업 연관의 전방효과, 후방효과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적 보완 관계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경제에 관련해 일본이 협력 가능한 부문, 그리고 일본으로서도 필요한 것은 일본이 고도성장기에 유효했던 기술체계를 생

산활동이나 연구활동의 현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것이다. 엔고로 일본에서는 채산성이 없어진 기술도 기술체계 전체로 보면 어느 나라에선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중요한 담당자의 하나가 한국인 셈이다. 한국 기업 중에는 최근 일본에 공장을 세우거나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기술상의 진화성이 하나의 이유인 것은 틀림없다.

동북아 경제협력과 일본의 역할

동북아시아 협력에 관해서는 여러 구상이 논의되는 데 비해 구체적 연구가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관련국 사이의 합의 형성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확고한 관련국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동북아시아에 관한 광역개발계획의 국제공동연구를 제창하고자 한다.

광역개발 연구계획은 먼저 관련국이 동북아시아 개발계획 프로젝트의 리스트와 개별 프로젝트의 개요를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들의 재구성 또는 개선 작업에서 동북아 전체가 어떠한 가능성을 갖는가를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수리계획법, 매크로 PERT, 매크로 엔지니어링 등의 수법이 이용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여러 계층의 정책 담당자에게 장기적인 합리성에 입각한 광역개발의 시각을 제공한다.

개발 구상의 형성에는 당연히 다국간 협력에 의한 프로젝트 실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는 관련 당사자들이 구상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도 전문적으로 동북아시아 개발·연구를 전담하는 상설 국제 연구 협력의 장을 일본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과제를 몇개 들어 보자. 그 중 하나는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협력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장대한 사업이며 주도 면밀한 계획화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매크로 경제정책, 경제법의 정비, 기업 경영에 관한 관리 기술과 마케팅 능력 부여의 문제, 대외 경제관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어떠한 순서로 실행해 옮겨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시장경제의 성공 여부, 또는 그 부작용 정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총론적 정책 외에 면밀한 실행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본은 2차대전 후 경제 붕괴로부터 부흥한 경험이 있다. 일본은 여기에서 얻은 지적 자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식의 '구조 조정(Structural Adjustment)'의 틀에

따라 금융시장 자유화를 축으로 하는 시장경제화를 성급히 진행하려 했다. 물론 이와 병행하여 일본의 전후 부흥정책도 상세히 검토했겠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일본의 '관리된' 이행 방식은 미국식 구조조정과는 대조적인 모델이므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했으면 보다 나은 이행 모델을 찾을 수 있었을

“

일본은 2차대전 후 경제 붕괴로부터 부흥한 경험이 있다. 일본은 여기에서 얻은 지적 자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식의 '구조 조정(Structural Adjustment)'의 틀에 따라 금융시장 자유화를 축으로 하는 시장경제화를 성급히 진행하려 했다. 물론 이와 병행하여 일본의 전후 부흥정책도 상세히 검토했겠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일본의 '관리된' 이행 방식은 미국식 구조조정과는 대조적인 모델이므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했으면 보다 나은 이행 모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

것이다. 그 비교 검토 과정에서 매किन류 모델처럼 재정 부문의 근대화를 금융 자유화에 선행시키는 프로그램도 고려되었으리라 믿는다.

현지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일본은 충분히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봉고는 이미 1992년부터 정책 조언을 요청해서 일본이 제공한 '치방책'을 이용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혼란, 혹은 그 과정에서 생산 감소를 막기 위한 매크로 경제기술 제공은 일본이 협력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은 인적 자원을 통한 국제 공헌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비교하면 뛰어난 전문가를 해외 파견하는 제도가 매우 빈

약하며, 현지 요청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인적 공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은 '경제개발에 의거한 안전보장'을 추진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일본이 마땅히 국내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이행 경제의 기업에 마케팅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훈련, OJT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경영기술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 경제에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현지에서 교육해 나가야 한다. 로스필드는 러시아의 총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현재 이를 활용하는 경영 관리 능력만 있으면, 미국의 8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훈련 계획은 일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국제 기관의 기술 원조 제도와 관련지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통적 생산 부문이 잔존하고 있는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최근의 아시아형 발전모델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문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아시아 기적은 수출 지향형의 공업화 전략이 주효해서 얻어진 것이다. 아시아의

1980년대 이후 개발 전략은 해외 산업과 연관 가능한 일부 국내 산업을 국제적인 생산 체계에 연관시킨 것이었다. 그 결과 연계를 구성하는 선진 공업과 내향형 국내산업,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지역간의 내부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게 되었다. 특정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Picking up the Winner Policy)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형 산업도 부양된다는 생각(Trickle-down Strategy)이었지만, 이

“ 일본은 인적 자원을 통한 국제 공헌을
감시하는 풍조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비교하면 뛰어난 전문가를 해외
파견하는 제도가 매우 빈약하며,
현지 요청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인적 공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은 '경제개발에 의거한
안전보장'을 추진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일본이
마땅히 국내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러한 정책은 오히려
시장경제에서의 부
문간 격차 문제를
악기시키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나
라의 지역간 또는
산업간 격차의 허용
한계는 정치적으로
는 15~20배까지라
고 되어 있다. 이것
을 넘어서면 강제적

인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한계에 다다른 국가도 있다. 소득 분배의 격차가 국내 정치문제를 일으켜 이것이 지역 분쟁, 나아가 국제적인 충돌에 이르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일국의 내부 격차 축소는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넓게는 국제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초기 고도 성장기에 비하면 문제 해결은 어느 정도 쉽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롭게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중간 소득층의 수요가 중간 수준의 기술에

의한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도 국제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육성에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안전보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중소기업이 동북아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상호 보완성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일본에서는 엔고의 영향으로 조립형 대기업이 의존했던 하청기업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수입으로 대체하고, 생산거점 또한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현재 그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

다. 이들은 외국과의 합작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기술체계를 재편성할 필요성에 도달했다. 그 파트너로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최적의 후보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대륙 각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

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에 있어서는 우선 자유경제특구(FEZ)를 성공 사례로 만드는 것과 ‘군민 전환’ 지원이 중요하다.

경제특구는 분명히 러시아에도 만들어 졌지만 그 계획 및 운영이 적절치 못해 중국의 실적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약간의 실적을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지향해야 할 것은 냉전체제 붕괴를 맞아 역사적 정당성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이를 실천하는 최적의 전략은 다음 아닌 동북아시아에 대한 경제 개발 협력이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의 기본적 틀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국교를 회복하고 2차대전 청산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동북 아시아의 경제개발 협력 당사국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광역 경제 개발 계획 연구를 창설해서, 2국간 공동 개발보다는 다국간 광역 개발 전략을 우선해야 한다.



러시아 당국은 그 경험에서 거시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특구를 일정 궤도에 올리기 위한 협력은 시장경제화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군산 북한체의 민수 전환이 급선부이

올리고 있는 사례로서 나호토카 FEZ(현재 이 지위는 정치중)를 들 수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우대 조치 또는 동남아시아 제국의 외자도입 등과 비교하면 법적 정비가 늦어서서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리하여 한국 등으로부터의 기업 진출의 움직임이 있지만 일본 기업은 아직 관망 중이다.

일단 성공 사례를 성립하게 되면, 러

다. 민수로의 전환이 늦어지면 그들은 부기의 제조·수출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향후 무기 수입국 주변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킨다면 어차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또 러시아의 실물 경제(real sector)의 재건을 위해서도 비중이 높은 군산 복합체의 민수 전환은 중요하다. 군산 복합체가 갖고 있는 막대한 생산 실비는 노후화가 심하고 전환이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부분화의 환율은 과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 경쟁력은 항공업 생산이 침체되어 있는 만큼 떨어져 있지않는 않다. 이에선 일본의 관리 이행 경험 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의 협력에 대해 언급해 보자. 향후 중국에서의 가장 큰 경제 문제는 고용 흡수 문제이다. 1억 5천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잠재 실업에 더해 향후 기대되는 국영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공업 발전은 중국의 외화 및 인프라 부족을 감안하면 낭장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 부문이 잠재 실업자들을 이끄는 정도 흡수해야만 한다.

중국 동북 3성의 농산물 생산 잠재력은 식량 안전 보장의 확보 차원에서 일본에게도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현안이었던 삼강평원(三江平原) 개발이 일본의 해외 협력 기금의 지원을 얻어 개발에 착수됐다.

중국의 인적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세계은행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일본은 사기업의 일본 연수 프로그램과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광범

위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지향해야 할 것은 냉전체제 붕괴를 맞아 역사적 정당성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이를 실천하는 최적의 전략은 다름 아닌 동북아 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 협력이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의 기본적 틀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국교를 회복하고 2차대전 정산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경제개발 협력 당사국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광역 경제 개발 계획 연구를 창설해서, 2국간 공동 개발보다는 다국간 광역 개발 전략을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원조, 인적 자원개발, 투자 촉진, 기술 이전 등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해서 일본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동북 아시아 전역의 생산요소 효율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생산 요소 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기 개발 협력 정책의 전개 과정과 병행하여 현지 정부의 요청에 따라 거시 경제 운영의 정책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서 경제 후생의 향상과 국가 내부·국가간 소득 격차의 축소에 협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원활한 고도 성장 실현에 공헌해야 한다. 